

정부·여당은 규제완화로 기업주나 지원하고 있다

관련 기사 2, 3, 8, 12면



코로나19
팬데믹 후에도
여전할
세계적 불황

6~7면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코로나 재확산 대비하라.
의료민영화 말고!

5면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가

8면

코로나19·경제 위기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9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주의 경쟁이
위기를 키우다

10면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 ③

노동자 통제와
사회주의

11면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4면

코로나19 대책이라며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속도내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와 경제 타격에 대응한다며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한 고통이 여전하고 3월 4일 충남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4월 8일 정부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더욱 포괄적인 규제완화 계획을 내놔다. 4월 29일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 자동차, 데이터, 산업단지 등 10대 산업 분야에서 65개에 달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하던 시기에 맞춰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고, 올해 1월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을 틈타 더욱 과감한 기업 규제완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와 악화하는 경제 위기 대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그 내용은 결국 기업 이윤을 우선하는 규제완화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도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통해 규제 완화와 토목 사업을 벌인다면, 이는 정부가 총선 압승 이후 우파적 정책을 추진해 지지층을 넓히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우파 신문이 이렇게 말할 정도이니 정부의 '우클릭'이 그만큼 노골적인 것이다.

실제로 이번 규제완화에는 기업 이윤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할 조처들이 가득하다.

의료 규제완화 정책에는 원격의료 확대, 줄기세포 활용과 유전자 검사 관련 규제완화, 의료기기 광고 규제완화 등이 포함됐다. 모두 안전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대형 병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바이오 기업들의 이윤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와 같은 규제완화가 의료 영리화를 강화해 결국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며 "재난을 빌미로 한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데이터 규제도 더욱 완화하겠다고 했다.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도 이름만 가리고 기업에 넘겨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기존 데이터 3법에서는 이와 같은 민감한 정보의 활용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이번에 분명한 지침을 만든 것이다.

심지어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민감성이 높은 진료기록, 유전정보, 희귀질환 정보, 성병 정보 등" 의료 정보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가 개선돼 환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몇몇 정보 공유는 환자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이천 화재... 규제 완화로 인한 참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5월 1일 이천 화재 참사 합동 분향소

추진하는 정보 공개의 진정한 목적은 기업들의 돈벌이를 돕는 것이다. 이를 가리고 기업들에게 넘긴다지만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에 따라 민영 의료보험 가입이 제약되거나 취업에서의 불이익까지 걱정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8명이 죽거나 다쳤지만 이번에 수소 관련 안전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한다. 수소차 충전 압력 허용치를 높이고, 도심 공원 내 수소충전소 건설을 허용하고, 창원공단에 액화수소 제조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환경 파괴, 안전 위협

정부는 구미 산업단지와 관련해 상수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입주 규제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구미 산업단지는 경상도의 식수 공급원인 낙동강가에 위치한다.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주민들은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게 된 것이다.

또 전체 산업단지에 재해 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산업단지 주변의 환경 오염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재활용 사용 의무를 완화하고,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지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골적인 환경 파괴 조처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가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규제 대상 기

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추가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가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전히 기업 이윤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 경제가 성장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들이 지난 20여 년간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지만 규제완화는 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규제완화가 근본에서 이윤율이 낮은 상황을 개선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일부 기업은 규제완화를 통해 득을 봤을지라도 그 혜택은 분배되지 못했다. 지난 수십 년간 불평등은 커져왔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사기로 드러난 줄기세포 치료제 인보사 사태, 38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등은 규제완화가 낳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 줬다.

코로나19 사태와 실업이 급증하는 상황은 이윤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닌 정반대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환경 파괴는 중단돼야 하고, 의료 영리화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려면 이들의 필요를 우선하는 생산과 분배가 필요하다.

정부의 친기업 이윤 중시 방향이 분명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아닌 투쟁 강화에 강조점을 뒀야 한다.

신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좌절과 재시도

김하영 쓰고 엮음, 책갈피, 228쪽, 12,000원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마이크 데이비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이클 로버츠, 우석균, 장호종 지음
책갈피, 208쪽, 12,000원



총선 후 3주 동안 규제 완화만 줄창 강조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행로가 그려진다

김문성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은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규제를 받은 KT가 K뱅크의 대주주 노릇을 할 수 있게 원포인트 개악을 한 것이다. 이는 새 국회의 정치적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지금 기업주들을 대변하는 우파 언론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학법) 등 규제 완화 법안들을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자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영리화를 대폭 확대할 목적이고, 후자는 제조업을 위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기획재정부가 4월 말 내놓은 방안들을 보면, 원격의료 등 그동안 의료 영리화의 상징처럼 돼 있던 것들을 코로나 국면에서 필수적인 비대면 서비스라고 포장해 규제 완화의 우선 목록으로 올려 놔다.

5월 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자율주행·AI(인공지능) 등에 필요한 고품질 공공데이터와 통합기업정보·바이오 데이터 등의 금융·의료 분야 핵심 데이터를 과감히 개방해 신산업 창출을 추진하겠다.”

정부·여당은 올해 1월 의료와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해 진보·좌파 진영이 반대해 오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 정보들을 영리 추구의 재료(부품)로 삼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최근 이 개악 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양에 안 찬다고 불평을 해 왔는데, 정세균의 6일 발언은 이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체크 등에 이 가명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됐으며 이번 규제 완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진보 진영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



촛불 무임승차했는데 최대 수혜! 문재인 정부는 통합당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업주들을 위한 규제완화와 노동개악을 이뤄 내 그들의 신뢰를 붙잡으려 한다.

나19 대응에 독립적이지 않았던 것이 개악을 막는 데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사실 경기도 이전의 물류센터 건설 현장 화재 사고도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안전 규제를 실행하지 않거나 개악한 것의 간접적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정부 예산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을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고 광고했는데, 실은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는 그중 20퍼센트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생색은 내지만 주기 싫은 티를 이렇게 낸다. 기업주들에게는 수십조 원을 퍼주고도 더 큰 선물을 주려고 안달이면서 말이다.

요구 목록들

다른 한편 여권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차기 국회의 개혁 의제로 띄우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2800만 명에게

고용보험을 다 적용하자는 것이다.

물론 고용보험의 전면적 확대는 노동계가 요구해 왔던 것이기도 하다.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규제 완화 정책들과 달리, 준비된 것 없이 애드벌룬부터 띄운 것이라서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들조차 난점 해소를 어떻게 할지부터 보도하는 모양새이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자와 노동자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는데, 정해진 고용주가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특수고용 자체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만든 고용 방식이니 말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를 정부가 회피해 온 탓인데, 정부는 그 문제에는 침묵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개혁 의제로

꺼낸 것은 첫째, 실제로 고용 위기가 심각하고, 둘째, 사회적 대화를 위한 거래 목적일 것이다.

5월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 감소 폭이 통계청이 발표한 것보다도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전년 대비 0.7퍼센트 감소로 봤는데, 실제로는 7.6퍼센트 감소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전면 확대”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 위기 긴급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면서 노동계의 핵심 요구로 삼은 것이다.

문재인의 5월 1일 노동절 메시지도 정부의 방향을 시사한다.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노동자, 기업과 함께 혼신을 다해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문재인이 “사회적 주류”라고 한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생일 격인 노동절에 정작 노동계급 연대를 위한 대중집회와 행진을 열지 않았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정부에 협조한 결과인데, 경찰은 소규모 행진조차 가로막았다.

문재인의 메시지는 이제 위상이 오른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노동자 대중을 설득하라는 것이다. 무엇이 노동계에 대한 양보 목록이 될지는 봐야 알겠지만, 정부와 사용자들의 요구 목록에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임금 억제·삭감, 보험료 인상 등이 포함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IMF 공황 국면에서 개최된 1998년 제1차 노사정위원회에서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리해고와 파견법 도입을 노조 인정, 실업급여 증액 등과 맞추는 데에 합의해 준 전례가 있다.

친기업에 포퓰리즘 소스 치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봄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으나, 노동개악을 본격화하려고 한 2018년 후반부터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조국 국면 등을 거친 뒤인 지난해 가을부터는 청년층에서 지지율이 더욱 떨어져 위기감에 젖어 있었다.

그럼에도 역대급 반사이익 효과(해외 선진국들의 코로나19 방역 실패, 재난 긴급 소득 지원 확대에 반대할 정도로 수구 반동적인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감 등)로 올해 4월 총선에서도 압승했다.

그러나 반사이익은 자체 동력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게다가 경제 공황에 대한 실망스런 대치가 앞으로 화두가

될 것이다. 총선은 운 좋게 넘겼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위기 대응 능력의 시험대에 있다. 경제 위기에 지금처럼 대처하면 정치 위기까지 더해져 훨씬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부패 혐의로 반사이익을 까먹을 수도 있다. 벌써 총선 직후 위성정당 비례로 당선된 양정숙의 부패 혐의 건이나 부산시장 오거돈의 성추행 사퇴 건이 그런 위험을 드러냈다. 양정숙은 민주당이 비례 후보로 선출해 위성정당으로 보낸 것이므로 핑계를 댈 여지가 없다. 조국 재판, 라임 사기 사태와 청와대의 관계 의혹, 드루킹 2심, 울산시장 개입 건 등 여러 수사와 재판도 위험 요소다. 그래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을 핵심 ‘개혁’ 의제로 삼는다.

책임론

이번 총선 결과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유리한 정권 후반기를 맞게 됐고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잡게 됐지만, 이는 야당 탓을 하기 어렵게 됐다는 뜻이다. 공식 정치는 전국 선거 3개(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치른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이후 3년 새 이 세 선거에서 모두 대승했다. 촛불에 무임승차한 민주당이 최대 수혜자가 됐는데, 승차 비용 책임론이 본격화될 수 있는 것이다.

통합당은 전통적으로 자본가들의 제1선호 정당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별히 둔감하고 무능한 데다가 총선 패배 후에는 자중지란에 빠져서 당분간 자본가들이 예전처럼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그렇다고 우파 정당이 예전의 지위를 잃었다고 속단하는 것도 위험하다. 민주당의 배신이 낳을 환멸로 반사이익을 얻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참에 통합당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업주들을 위한 규제 완화와 노동개악을 추진해 그들의 신뢰를 붙잡으려 할 것이다.

이 과제에 성공하려면 진보 진영 지도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을 포섭할 포퓰리즘적 행보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이유다. 당장의 총선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노동운동의 대표적 조직들은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 노선에 기울어 왔다.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 개혁을 성취하고 우파의 재복귀를 막겠다는 민중주의(포퓰리즘) 전략이다.

지금 노동운동의 대표적 조직들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경제 공황이 시작되고 침체가 더 깊어질 국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들의 다수는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가안이 부결될 때와 분위기가 다른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양효영

공식 정치나 사회운동에서 혐오 표현 문제가 불거지며 종종 논쟁이 일어난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막말을 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차명진은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옹호했다.

“자유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그게 무엇이든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관성[이다].”

“(유가족이 자식의 죽음을) 회 쳐먹고 찜 찌먹고 뼈까지 발라먹는다”는 역겨운 말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서 학생들의 항의를 받은 연세대 교수 류석준도 “학문의 자유”라며 합리화했다.

한편, 코로나 확산 초기에 우파들은 중국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기도 했다. 황교안은 “우한 코로나”라는 명칭을 고수했고, 일부 우파들은 중국인을 내쫓자고 온라인에서 선동했다.

우파들은 자신들의 ‘망언’이 비판받을 때마다 “표현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삼는다.

하지만 그들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건 순전한 건강부회다.

마르크스 자신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적해 왔듯이, 표현의 자유는 노동계급 투쟁에 의해 확대돼 왔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결사(대표적으로 노동조합과 그에 기반한 정당)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지난한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한국의 진보·좌파는 독재 하에서 정부 비판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동아투위(박정희 유신정권 탄압에 항의하다가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이 결성한 단체) 등 검열에 맞선 언론인들의 저항도 있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형식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미디어를 지배하며 무엇이 방송·출판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은 때때로 법적 장치들로 공개적인 표현을 제약할 수도 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혁명적 또는 친북적 사상과 견해, 단체 결성을 탄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는 누구의 자유이고, 무엇을 말할 자유인지를 물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처럼 표현의 자유를 그저 받아들여야 할 추상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고 구체적 맥락 속에서 본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란 노동자와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 규제의 위험성

그렇다면 우파적이거나 반동적인 표현을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반동적 인사들의 발언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표현 자유 불허(“노 플랫폼”)가 피차별자 운동에서 흔히 지지 받는



2017년 미국 샬럿빌에서 벌어진 나치의 인종차별적 공격에 맞선 대규모 항의 시위. 이런 대중 운동이 차별에 맞서는 진정한 동력이다

다. 이런 입장은 원래 서구에서 나치에 맞서기 위한 혁명적 좌파의 특수한 전술로 제기된 것인데, 오늘날은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파시즘은 어느 우파와 달리 노동계급의 민주적 권리를 모조리 분쇄하려는 특별히 반동적인 정치 운동이다. 따라서 표현 자유 불허 전술을 무분별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우파나 보수적 개인들을 규제(처벌)하라고 요구한다.

여러 우려와 논란이 있지만, 한국에서도 다수 인권 운동가들이나 법학자들은 혐오 표현에 대한 국가 검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듯하다. 이런 의견을 종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2016년, 이하 연구)는 혐오 표현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규제 수위에는 이견이 있는 듯하지만 좀 더 엄격하게 혐오 “선동”을 규정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도록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도 꽤 있다.

예컨대, 지난해 말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를 낸 이정희 전 의원은 인종차별적 혐오 선동에 대해 제한적으로 형사처벌을 입법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의원은 공직자, 정당인, 언론기관 종사자 등 파급력이 큰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순유포도 처벌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대체로 ‘사상의 자유시장’론으로는 혐오 표현이 없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차별을 겪는 소수자들은 혐오에 대항하는 표현을 내기가 더 힘들고, 결과적으로 혐오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유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경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상과 관념의 시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연구)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사상의 시장’은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불공정성을

바로 세우려고 자본주의 국가를 지렛대로 삼는 건 효과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

우선, 국가가 혐오 표현을 규제해도 혐오 표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역사적 경험이다.

독일에는 혐오 표현을 폭넓게 규정해 처벌할 수 있는 형법(독일 형법 제 130조)이 있다.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도 혐오 표현 규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법률을 근거로 망언을 내뱉은 일부 우익들이 처벌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유럽에서 파시즘이나 극우 포퓰리즘은 맹렬한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나치가 중심부에 있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원내 2~3위를 다투는 주요 정당으로 부상했다.

파시즘과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토양(경제 위기와 노동계급 운동의 약세 등)이 바뀌지 않는 한 법률적 규제도 혐오 표현이 수그러들지는 않는다.

국가 규제(검열) 강화 요구는 경찰과 검찰 같은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국가 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폴리처상을 받은 저널리스트 글렌 그린월드는 검열이 낳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전 세계 해킹과 감시 실패를 폭로한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을 도와서 기밀 문서를 <가디언> 신문에 보도한 것으로 유명하다.

“검열이 혐오 선동 집단을 약화시켜 없애버릴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오히려 검열은] 혐오 선동 집단을 언론의 자유 순교자로 만들고, 그들의 불만에 먹이를 던져 주고 더 파괴적인 활동 수단을 찾도록 만든다.”

부메랑

그린월드는 “유럽에서는 혐오 표현 규제법이 자주 좌파적 관점을 억누르고 처벌하는 데 쓰인다”고 지적했다.

특정 표현을 처벌하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진보·좌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억압적 국가 기관이 법률을 해석·적용하므로 혐오 표현 규

제 입법을 종종하게 짜는 것이 이런 위험을 막지 못한다.

실제로 유럽의 혐오 표현 처벌법들은 반동적 우익이나 나치를 처벌하기도 하지만 정부와 체제에 비판적인 좌파적 세력들에게도 칼끝을 들이댄다.

2012년 영국에서는 10대 무슬림 청년 아자르 아메드가 혐오 표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영국이 군대를 파견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분노를 표현하며 “모든 군인들은 죽거나 지옥에 가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쓴 것에 대해 처벌받았다. 그의 표현이 “인종 차별적”이라는 이유였다.

특히, 최근 여러 서구 나라에서 이스라엘 시온주의에 대한 반대 활동가들이 “유대인 혐오 선동”으로 처벌받고 있다. 영국 지배자들은 노동당의 좌파적 당수였던 제레미 코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유대주의자라고 거짓 비방했다.

2015년 프랑스 대법원은 “팔레스타인이여 영원하라, 이스라엘 보이콧 하자”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반시온주의 활동가들에게 혐오 표현 유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프랑스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산 채소에 “보이콧”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인종 혐오 선동”으로 기소됐다.

홍콩 당국은 얼마 전 교사가 SNS에 “부적절한 발언”이나 “혐오 표현”을 올릴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 외신은 이것이 홍콩 시위에 참가한 교사와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배자들이나 우파도 “혐오 표현” 처벌을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악용이 가능한 이유 하나는 “혐오”의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혐오란 주관적 호오(好惡)와 관련된 개념이다. 예컨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배자들을 증오하고, 광우 학살의 피해자들은 전두환을 증오할 것이다. 무슬림 혐오, 성소수자 혐오처럼 일부 혐오는 자본주의가 원인인 구조적 차별과 연결돼 있지만 그

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상당수 페미니스트들이나 인권 운동가들이 혐오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해 온 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는 “장애인은 착하다.” “흑인은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 같은 잘못된 일반화와 편견도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규제·처벌 범위를 혐오 “선동”으로 좁히려는 주장도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난민은 테러리스트다’(혐오 표현)와 ‘난민을 내쫓자’(혐오 선동) 사이에 만리장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중 운동

국가의 힘으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얼핏 더 쉽고 빠른 대안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인종차별, 여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등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비롯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차별과 혐오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하고 부추긴다. 사람들의 차별적 편견은 자본주의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특히,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노동자·서민들이 위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자, 각국 지배자들은 불만의 화살을 피하려고 속죄양을 찾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겨 왔다.

이런 우파와 지배자들의 차별 편견 부추기기에 맞서려면 그들의 주장을 낱알이 반박하고 대항적인 집회와 항의를 조직해서 그들의 사상이 결코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 차별과 혐오에 맞선 대중 투쟁 속에서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강요하는 차별적 생각이 아닌 평등주의적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국가나 지배자의 간섭 없이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아무리 진보적인 생각이더라도) 아래로부터의 반론이나 항의 없이 말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쟁해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게끔 노력하고, 대중 동원에 힘써야 한다. 대중 운동이야말로 차별에 맞서고 기존 관념을 바꾸는 진정한 동력이다.

2017년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빌에서 나치가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공격한 것에 맞서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건 좋은 사례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기세가 눌린 나치와 극우파는 자신들의 시위를 취소하거나 매우 소수만 모일 수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를 지키거나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중시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계급정치로 무장하고 조직하고 행동할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그것이 지배자들에 맞서는 진정한 힘을 얻고 강화하는 방법이다.

사진 출처 Tim Center(틀리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코로나 재확산 대비하라. 의료민영화 말고!

Q 문제인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종료했다고 말하는데요, 한국은 원래 저강도 거리두기만 해 왔어요.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처럼 외출과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았죠. 교회 등 밀집 시설과 학교는 닫았지만요. 따라서 이 정도 거리두기조차 하지 않겠다는 데에는 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을 정도예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여전히 감염 고리가 밝혀지지 않는 확진자들이 소수지만 계속 생기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발견되지 않은 채 20일 넘게 일상적으로 지내며 감염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이 확진돼 가동을 멈춘 미국 핵항공모함 같은 경우를 보면 무증상 감염자가 80퍼센트나 돼요. 지금 확진자가 0명이라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한국 내 지역감염이 정말로 사라졌다고 가정하면, 다른 나라들의 입출국 봉쇄가 안 풀리고 있으니 외부 유입도 없어서 현 상태가 6~7월까지의 유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같은 사례를 보면 개학 이후에 유치원과 외국인학교, 이주노동자 기숙사에서 감염이 재확산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종료와 개학은 모험적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자칫 잘못하면 오늘(5월 3일)은 정치가 방역을 망친 날로 기록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하려면 학교 시설과 인력에 커다란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려면 교실 내 학생 수를 크게 줄여야 할 거예요.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교사도 늘려야 하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하려면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할 겁니다.

보건 교사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손 씻는 곳도 더 많이 늘어나야 할 거고요. 그런데 정부 발표에는 이런 조처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전교조 등 노동조합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Q 기획재정부가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4월 29일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원격의료에 눈에 띕니다.

그야말로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재난 자본주의라는 말은 나오미 클라인이 《쇼크 독트린》에서 쓴 표현인데요, 사회적 위기나 재난이 도래했을 때 자본가들이 이전에 추진하려 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안인 것처럼 내세워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



지금 공공의료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으면 재확산 때 한국은 가장 취약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다.

홍남기 부총리가 문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총리는 대통령이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기재부 총리만 탓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는 문제인 정부가 홍남기를 내세워 한국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게 객관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노골적이니까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올 뿐이죠. 재난지원금 논란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홍남기가 반대한다며 시간을 끌었는데 그게 불가피한 일이었을까요? 정부 자신이 망설였다고 봐야겠죠.

원격의료는 박근혜 때보다 그 대상이 줄기는 했어요. 박근혜 정부는 600만 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려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대상은 산간·도서 벽지, 원양어선, 독거노인 등 100만 명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양어선은 지금도 이미 원격의료를 하고 있어요. 세종시에서 의사 4명이 의사를 태울 수 없는 소형 원양어선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께 들어 보니 지금 문제는 그런 선박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엉성해서 약품도 제대로 챙겨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화로 뭘 지시해도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규제부터 제

대로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간, 도서 벽지의 경우를 보죠. 백령도에는 공중보건의 외과 의사가 한 명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분이 일이 생겨 육지에 나가면 백령도에는 팽장염(중수염)도 수술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 원격의료로 뭘 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필요한 건 병원을 짓고 필수 인력을 배치하는 겁니다.

외과적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30분 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없는 지역이 전국에 60곳이에요. 서귀포에는 분만실이 없죠. 분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1000건당 1건 비율로 사망자가 생기는 게 분만입니다. 분만 시설이 아예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2019년 기준으로 40곳입니다. 이곳에 사는 임산부들은 아예 임신 7개월 때부터는 대도시 부근으로 나와서 사는 분도 있더군요.

군부대[에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환자가 생기면 병원에 보내야죠. 위급한 상황이라면 총기 사고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원격의료로 뭘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컨대 산간, 도서 벽지, 군부대 등에 필요한 건 원격의료라 아니라 공공병원과 인력, 헬기 등입니다.

교도소와 독거노인도 대상으로 언급됐는데요. 먼저 교도소에서는 아픈 환자들이 밖에 나가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재벌, 정치인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정부가 돈을 들여 교도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독거노인은 당연히 방문 진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컴퓨터만 달랑 쥐어줘서 뭘 일이 아니에요.

정부가 언급한 해외 사례들은 대부분 의료인 사이의 협력 체계이거나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예요.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하고 한국에서도 이미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경증 환자들에게 전화로 처방을 해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구의 다수를 대상으로 원

격의료를 하는 곳은 없어요.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Q 이런 대책들이 코로나19 대응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렇게 엉뚱한 곳에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건 2차 재확산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예요. 병상을 확보하고 인력을 동원하고 필수 의료자원을 생산하는 것 같은 일들 말이죠.

코로나 환자의 4분의 3은 공공병원에서 치료했어요. 대구에서 이번 코로나19 대처에 동원한 병상을 보면 1500병상으로 6000명가량의 환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나머지 병상 3만 개는 코로나19 대응에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전 근본에서 시장 논리가 낡은 문제예요. 감염병 병동은 평소에는 텅텅 비어 있어야 하는 병동입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에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시장 논리로 운영되는 민간 대형병원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빅파이브 병원들[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등 5대 대형병원]이 매년 1조 원 이상 돈을 번다고 해서 '빅파이브'입니다. 평균 3000병상이라고 생각하면 병상 하나당 1년에 3억 원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비워둔다고요?

현대 자본주의는 재고를 줄이려고 적시 생산 방식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대형병원 중환자실은 가득 차 있어요. 여유 병상을 거의 두지 않는 체제죠. 그래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공공의료를 가진 나라들로 유명하지만 그동안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돼 왔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만 유지하다 보니 이번에 의료체계가 붕괴한 겁니다.

의료 인력도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의료인 감염이 거

의 없었는데요. 대구에서는 꽤 있었어요. 대구시는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환자가 거의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상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 한국은 2차 재확산 때 가장 취약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이니까요.

300명상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들을 전국 곳곳에 설립해야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민간 대형병원과 그 소속 인력도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돈이 들죠.

필수장비 생산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인공호흡기가 90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에 명령해 필수장비를 생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장 등에 취한 조치들만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집회 때마다 투입되는 전경들이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는지도 봐야겠죠. 정부가 거리두기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서 거리두기를 이유로 정치적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이중잣대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에게 유급병가제도를 강제하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거리두기를 감시하고 제대로 안 되면 사업주를 처벌해야 합니다. 하청기업은 원청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도입할지도 두고 봐야겠지만 정부가 돈 안 들이는 식으로 하면, 즉 노동자들이나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는 식으로 하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거리두기를 하려면 지금처럼 민간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만들고 운영해야 하죠. 또한 당장 정부가 돌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인터뷰 전문은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정리 장호중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가

토마시 텡글라-에반스

심각한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 위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사장들일지, 아니면 노동자일지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공공 서비스와 노동계급 생활 수준을 공격하는 가혹한 긴축이 뒤따랐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지금 다가오는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한다. 1930년대 대공황에 더 가깝을 듯하다고 한다.

그때는 실업자가 속출하고 파시즘이 부상한 시대였다. 거대한 노동자 투쟁도 벌어졌다.

2020년은 세계 GDP가 제2차세계대전 이래 처음으로 하락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위기는 자유 시장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음을 보여 줬다. 그리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나고 긴축과 불평등이라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위기에 빠지는 경향을 타고난 이 체제를 끝내야 할 것이다.

논평가들은 경제 위기가 자유시장 체제 외부에서 오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만 없다면 이 체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그로 인해 여러 제한 조치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취약했다. 세계 자본주의는 2007~2008년 위기에서 제대로 회복한 적이 없었다.

2008년 위기 때 금융 부문과 주택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이는 수익성 위기라는 훨씬 심각한 위기의 증상일 뿐이었다.

과잉생산

경제 위기는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위한 생산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가 조직되는 방식에서 생겨난다.

혁명이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시장의 “무정부성”을 띠고 있지만 일터에서는 “독재적”이라고 지적했다.

개별 기업에는 계획이 있지만, 기업들과 산업 부문을 아우르는 계획이나 경제 전체 차원의 계획은 없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팔리지 않는 상품의 과잉생산이, 다른 한편에는 결핍이 공존한다.

2020년 4월 역사상 처음으로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놀라운 소식이 그런 무정부성을 잘 보여 준다. 누구도 사려 하지 않는 막대한 양의 원유가 시장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원유를 저장할 공간마저 부족할 정도다.

지난 1월 중국 정부가 마지못해 우한시(市)를 비롯한 몇몇 지역을 봉쇄했을 때부터 원유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소비량이 몇 주 만에 20퍼센트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더 혹독하게 쥐어짜려 한다. 5월 1일 메이데이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이 주최한 집회 모습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려고 러시아를 상대로 유가 전쟁을 개시했다. 원유 수요가 격감하는 바로 그 시점에 생산이 늘어난 것이다. 사우디가 경쟁 상대를 타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경쟁은 과잉생산만이 아니라 수익성 하락 위기도 낳는다. 이것이 불황의 근본 원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나 봉쇄령 하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은 백만장자들이 부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이다.

마르크스는 1868년에 이렇게 썼다. “어떤 나라에서 노동이 멈추면 그 나라는 1년은커녕 몇 주 안에 망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바이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이어 가려면 임금을 받고 노동력(일하는 능력)을 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기가 생산한 것의 가치를 온전히 돌려받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이 격차를 “잉여가치”라고 불렀다. 바로 이 잉여가치가 자본가들의 이윤의 원천이다.



4월 6일 민주노총서울본부와 서울민중행동이 주최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자본가들이 이 잉여가치에서 자기 몫을 얼마나 챙기느냐는 그 기업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 기업과 국가들은 상호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윤을 기업주의 개인적 부로 챙기지 않고 생산에 재투자한다.

자본가들은 경쟁 때문에 최신 IT 기술에든 신식 생산 설비에든 더 효율적인 생산 수단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경쟁자를 제치거나 따라잡기 때문이다.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개별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노동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고 했다. 그러나 신규 투자의 대부분은 노동이 아니라 기술과 기계 설비로 들어간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기계에 대한 투자가 노동에 대한 투자에 비해 훨씬 크게 늘어난다.

영국 제조업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된다. 제조업은 여전히 경제의 중요한 일부이지만 이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수는 제1차세계대전 때보다 줄었다.

개별 사장들은 여전히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기에 투자 대비 이윤의 비율은 하락한다.

자본가들은 수익성 하락에 어떻게 대응할까? 사장들은 노동 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 조건을 공격해 착취율을 끌어올려서 노동자들에게서 잉여가치를 더 많이 짜내려 할 수 있다.

이때 정부도 덩달아 긴축 정책을 펴거나 공공 서비스를 공격할 때가 많다.

다른 방법도 있다. 기업들의 파산으로 비효율적인 자본을 제거해 다시 호황이 오도록 체제를 정리하는 것이다.(그러나 그 호황은 또다시 다음 불

황이 찾아올 조건을 마련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나타난다고 했다. 소수의 거대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큰 기업들이 파산하면 경제에 엄청난 구멍이 생기고 불황을 촉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마불사”라는 이유로 은행들과 대기업들이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는 것이다.

구제금융

2008년 위기의 근저에 있던 원인은 수익성 위기였다. 이에 대응해 각국 정부는 가혹한 긴축으로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기업과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의 비용을 치르게 했다.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대폭 낮추고, 값싼 신용을 시장에 쏟아부었다.

수익을 못 내는 기업들을 정리하는 건커녕 “좀비 기업”의 성장을 촉진했다.

좀비 기업이란 신용이라는 생명 유지 장치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을 말한다.

북미와 유럽 기업의 10~20퍼센트가 이런 좀비 기업이다. 세계 부채는 GDP의 300퍼센트를 넘겼다.

그래서 회복세는 매우 미약했고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세계 자본주의는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여러 나라 정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대응해 이번에도 기업들에게 더 많은 구제금융을 제공한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2007~2008년에 그랬던 것처럼 값싼 신용 정책에만 기대기 어려운 처지다. 이미 금리가 기록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파산할 수도 있지만 파산하는 기업은 대기업보다는 주로 소규모 기업들일 듯하다. 따라서 기저의 수익성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벌어질 일을 둘러싸고, 또 이 엄청난 불황의 대가를 누가 치를지를 두고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방향

지배계급 일부는 사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를 안다. 친기업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는 자본주의를 “리셋할 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사설란에 이런 주장이 실리기도 했다.

“지난 40년을 지배한 정책적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급진적인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 승전국 지도자들은 승전하기 전부터 다음 일을 계획했다. 영국은 포퓰적 복지국가를 약속한 베버리지 보고서를 1942년에 발간했다.

“이런 선견지명이 오늘날에도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체제 내에서 개혁을 제공할 능력이 약해졌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에는 전쟁 동안 막대한 자본이 전쟁으로 파괴됐기 때문에 전례 없이 긴 경제 호황이 왔다.

지금은 불황이고 사장들은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려 한다.

현재 기업주들은 기업 편에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할 것이다.

영국 보수당의 긴축 정책을 설계한 전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은 영국산업연맹(CBI)에게, 지금은 정부 지출을 늘릴 때고 “공공부문 부채를 줄이는 것은 나중 문제”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2008년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죽음”을 논했다. 자유시장 정책의 실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윤을 지키기 위한 긴축 정책이 이어졌다.

인상적인 저항들도 있었다. ‘아랍의 봄’과 유럽의 반긴축 항쟁들이 그런 사례다. 그러나 대체로, 급진적 운동들은 결국 약화되고 저지됐다.

다시 한 번 수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대한 변화를 쟁취할 계급 투쟁은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주들이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위기의 결과를 결정짓기 위한 투쟁을 고취해야 한다. 바로 지금 그래야 한다.

영국 노동당[개혁주의 세력]과 여러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호소하는 ‘사회적 평화’와 ‘전 국민적 단결’을 거부해야 한다.

기업주들과 맞서고 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적 해결책을 관철하는 데에서 투쟁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윤 체제의 논리와 단절하지 못하면 기업주들이 우리 계급에게 그 대가를 떠넘길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02호
번역 오수민

코로나19·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김영익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정부들은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것에 안절부절하며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팬데믹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주요국 정부들의 대외정책도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한 요인이다. 예컨대, 제재 문제가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제재로 ‘불량국가들’이 코로나19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월 이란 정부는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입하려다 미국의 제재로 좌절됐다. 앞서 3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는 코로나19에 대비해 의료 체계를 강화하려고 국제 통화기금(IMF)에 50억 달러 자금을 요청했지만, IMF는 이를 거절했다.

누군가 북한에 코로나19 대비에 필요한 의약품과 관련 기기를 보내려면 늘 유엔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위협에도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했다.

4월 28일 비영리기구인 국제구호위원회(IRC)가 아프가니스탄·시리아·예멘 등 전쟁을 겪는 나라,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빈국들 등 코로나19 위협에 특히 취약한 34개국에서 향후 코로나19 확진자가 5억~10억 명, 사망자는 170만~3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런 곳 중 상당수는 강대국, 특히 미국의 간섭과 전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붕괴하고 난민이 대거 발생한 곳이다.

10억 명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위기는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모순이 더 증폭되기도 하는데, 유럽연합(EU) 내부의 균열이 더 커진 것이 한 예다. 이번 코로나19와 경제의 이중 위기에 직면해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은 유럽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보다 국민국가별로 각자 대처하며 분열상만 더 드러냈다. 유럽 국가들끼리 방역 물품을 서로 가로채거나, 경제 위기 해결 방안을 놓고 가입국들의 견해차가 충돌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유럽연합이 국민국가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생각은 커다란 착각임이 다시 확인된다.

코로나19 위기로 중국 경제가 일시 마비되자,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세계 생산이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주요 국가들에서 “탈세계화” 주장이 더 거세질 듯하다. 강대국이 생산 네트워크(의 일부)를 자국으로 되돌리려 하거나, 특정 강대국을 중심으로 지역 블록을 구축하려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시도는 국제 질서에 새로운 모순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

경제 위기는 중대한 지정학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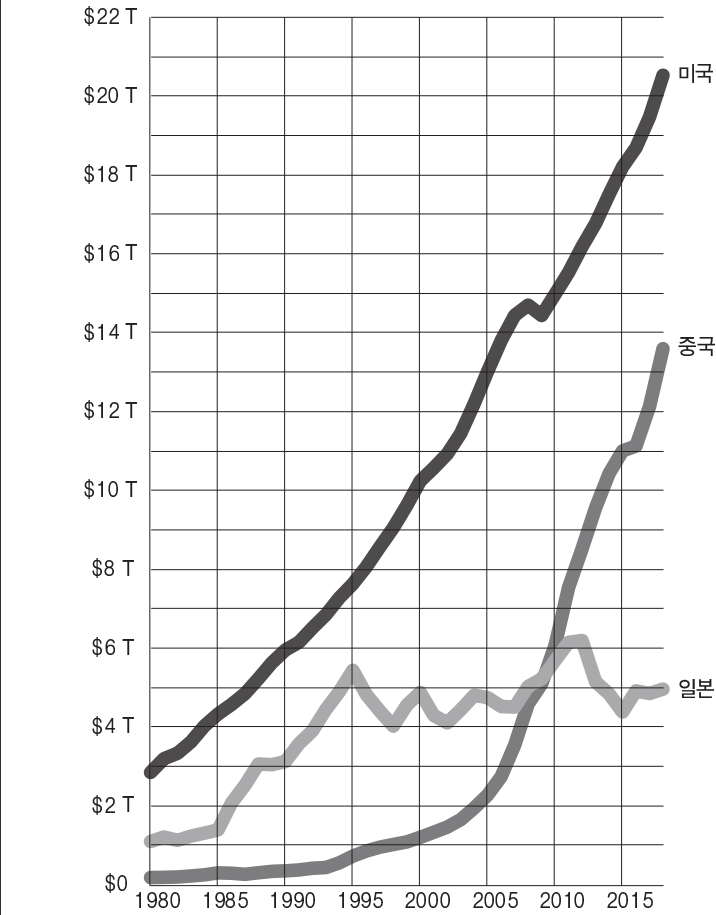


그림1) 국민총생산 추이(단위: 1조 달러, 출처: 세계은행)

를 수반할 수 있다. 선진국 경제들의 성장이 둔화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면, 줄어든 파이를 놓고 세계 자본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들 간의 협력적인 위기대처를 어렵게 한다.

게다가 국가들의 경제력 비중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자본주의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한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미국의 다른 경쟁국들이 성장해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 왔다. 가장 두드러진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그림1). 즉,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가장 위협할 존재로 중국이 등장한 것이다.

현재의 코로나19·경제 위기가 미·중 패권 경쟁과 갈등에 어떤 영향을 줄까? 코로나 사태 초기에 서구 언론들은 중국판 ‘체르노빌 모먼트’가 시작됐다고 했다. 1986년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5년도 안 돼 소련이 붕괴한 것과 비슷한 운명을 중국이 밟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듯하자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시작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서구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세계적 위기에 직면해 전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이제 새로운 물음이 고개를 들고 있다.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세계 패권이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중국이 코로나19 위기의 틈을 노려 운신의 폭을 넓히는 듯하자, 트럼프 정부는 이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단지 트럼프만이 아니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도 트럼프와 비슷

하게 중국에 대한 강경론을 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정부는 틈만 나면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트럼프와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앞장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래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지만 말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코로나19 책임을 묻겠다며 보복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 1조 달러를 거둬들이는 것”을 할 수 있고, 중국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4월 27일 트럼프는 한 기자회견에서 제1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물었던 배상금보다 더 많은 돈을 중국이 내게 하겠다고 으러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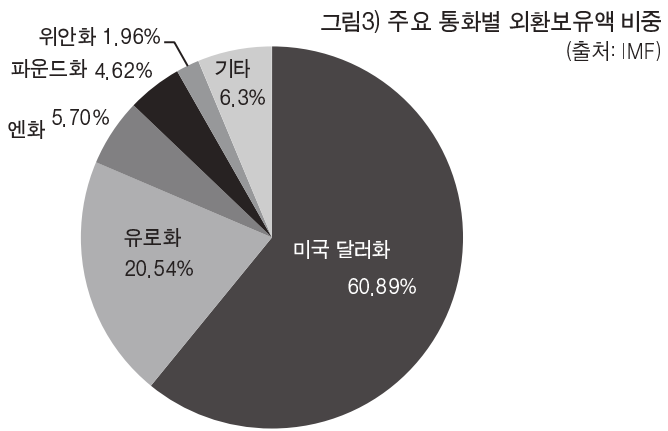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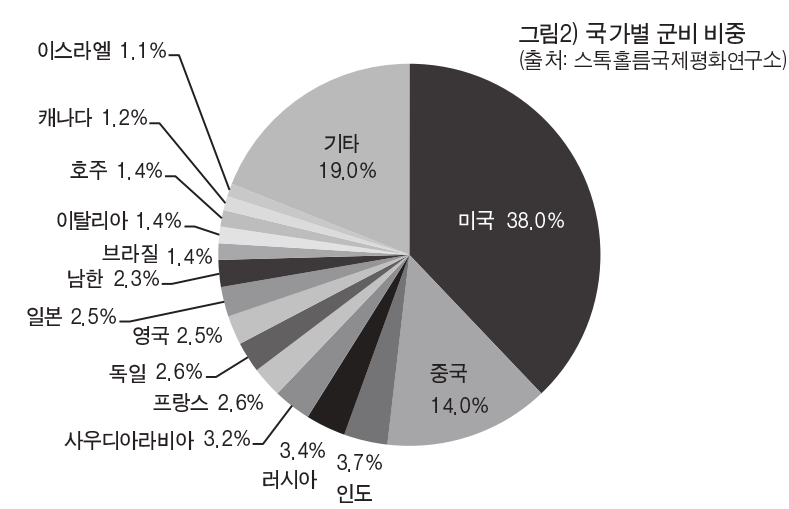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언사도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이런 일은 “이중의 위기”에 처해 미·중 갈등 등 강대국 간 경쟁이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번 위기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다.

중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격차가 상당하고 한동안 계속 그럴 것이다(그림2). 미국의 군비 지출은 여전히 2위에서 10위 국가들의 군비 지출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단지 군사비의 차이로만 미국과 중국의 격차를 설명할 수는 없다. 미국은 유라시아 일대에 광범한 군사기지망과 동맹국 체제를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왔다. 반면 중국의 해외 군사 진출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고, 동맹국 확보라는 면에서도 미국보다 분명히 열세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다. 미국의 거대 은행들은 국제 금융시장을 지배하며, 현재 국제 무역 결제의 약 90퍼센트, 세계 외환보유액의 약 60퍼센트가 달러로 표시된다.(그림3)

지금 중국 경제는 제 코가 석자인 처지다. 그래서 2008~09년 위기 때처럼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구실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충돌하는 이해관계

그러나 미국의 패권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해서, 미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유일 패권국이므로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도전들에 모두 응해야 한다. 한정된 역량으로 말이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제 위기에 처한 자유시장 국제 질서를 홀로 지탱하는 것은 미국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강대국 간 갈등으로 불안정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여전히 큼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이 점차 첨예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조만간 재점화될 공산이 크다. 지금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첨단 산업에서 기술력을 키워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관심이 크다. 이번 코로나19 책임 공방도 무역전쟁이 재점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대만 문제, 남중국해 갈등 등 기존의 지정학적 갈등이 더 악화될 여지도 충분하다.

경제 위기가 세수 감소와 지출 증대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데도 미국과 중국은 군비 지출을 줄일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최근의 추세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수년 동안 계속 떨어져 왔지만, 중국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따라가지 않으며 항상 경제성장률보다 높다.

미국 트럼프 정부도 군비 지출을 늘리는 데 열심이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2015년 5860억 달러에서 지난해(2019년) 7320억 달러로 늘었다. 지난해 미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5.3퍼센트 였는데, 증액분만으로도 독일 1년 국방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최근 미국의 군비 지출 증가가 미국이 강대국 간 경쟁을 크게 의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로 인한 손실과 자국의 지위 하락을 만회하고자 비시장적 방식, 특히 군사력 증대에 기대고자 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해 자국의 권력과 지위를 노리고 있다고 여긴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지금 위기가 1930년대 대불황 때처럼 강대국 간 전면전으로 나아갈 것일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것은 2020년대가 지난 10년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에는 반자본주의적인 대안이 성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리는 노동계급 혁명이라는 가능성을 실현하려 애써야 한다. 그러려면 그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혁명적 정치 조직이 필요하다.

기사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추자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

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헌장 기반 운동이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중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용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주의 경쟁이 위기를 키우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생물학적 위기가자 경제 위기가자 정치 위기가자.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대규모 경제 붕괴를 낳았다. 3월 초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실업수당 신청이 3000만 건에 달했다. 이는 세계 정치 질서를 더한층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1873~1896년 최초의 대공황은 서로 경쟁하는 제국주의의 발전에 박차를 가했고, 이들의 경쟁은 제1차세계대전을 촉발했다. 1929~1939년 두 번째 대공황은 열강간 경제적 경쟁을 격화시켜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할 조건을 조성했다.

돌이켜 보면 2007~2008년 금융 공황은 명백히 산업 자본주의의 세 번째 대공황기를 열었다. 2007~2009년 세계 금융 공황을 예측한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 누리엘 루비니는 2020년대가 “더 큰 대공황”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루비니는 이런 흐름을 낳은 열 가지 요인을 꼽는데 그중 하나가 “미·중 간 지리전략적 대립”이다. 아니나 다를까 현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의 “끔찍한 실수”를 지탄하며 사스-코로나바이러스-2가 중국 우한시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가 직접 발탁한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직무대행 리처드 그렌펠의 말과 상충하는 주장이다. 그렌펠은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공적으로, 또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과학계의 광범한 중론에 정보기관들도 의견을 같이 한다.” 그래도 트럼프와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줄곧 “우한 바이러스”를 운운한다. 마치 그런 바이러스들이 국적이 찍힌 여권이라도 들고 다닌다는 듯이 말이다.

영국의 보수당 우파도 트럼프와 폼페이오에 호응한다. 보수 일간지 <텔레그래프> 칼럼니스트이자 마거릿 대



트럼프 정부의 중국 때리기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

처에게 인정받은 마거릿 대처 전기 작가인 찰스 무어는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다. “정부 통제 체제, 과학과 학문에 대한 통제 체제의 비밀주의와 기만이 역사상 가장 급작스럽고 파급력이 큰 보건 위기를 낳았다.”

만화

트럼프의 행태는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트럼프는 치솟는 주식 시장과 낮은 실업률에 기대 11월 대선에서 재당선하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전례 없이 급속하고 심각한 경제 붕괴에 직면했다. 트럼프는 인종차별과 중국 때리기 수위를 높여서 지지를 만회하려 한다.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의 유감스러운 선두주자 조 바이든도 트럼프를 따라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런 당리당락보다 훨씬 심각하다.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중국에서 시작되는 공급 사슬을 이용하는 미국 대기업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 산업의 기술 수준을 향상하려는 시진핑 정부의 노력을 저지한다는 트럼프의 목표는 훨씬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지지는 미국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소심한 유럽연합이 이제는 몇몇 분야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칭한다.

게다가 중국도 똑같은 다중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상쩍은 공식 통계를 보더라도 2020년 1사분기에 중국 경제는 자그마치 6.8퍼센트나 수축했다. 시진핑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 초기

대응을 그르쳐 통치 정당성을 크게 의심받았다. 그 후 시진핑 정부는 엄청나게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했고 이는 효과를 낸 듯하다. 시진핑이 트럼프의 공격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리 없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상투어는 경제적으로 분명 맞는 말이다. 기업들은 적시생산과 중국 중심의 공급 사슬에 의존했다가 자신들이 얼마나 위태로워졌는지 깨닫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트럼프 정부는 공급 사슬을 국내로 되돌리라고 미국 기업들한테 촉구하고 있었다.

현재 위기는 이런 경향을 더한층 강화할 것이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일본 기업들, 특히 고부가가치 제조업 기업들한테 중국 현지 의존도를 낮추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돕는 데에 2400억 엔[약 2조 7446억 원]을 배정했다.

“탈세계화” 관련 논의가 널리 퍼져 있지만 다국적 생산 네트워크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이미 트럼프의 무역전쟁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노동력이 더 저렴한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 생산 능력은 제쳐 버리기에는 이미 너무 발달해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파편화되고 있고, 이는 경쟁하는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서 더 많은 갈등을 낳을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03호 / 번역 김준호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기금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획연재: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 ③

노동자 통제와 사회주의

이언 버철

최근 코로나19 위기와 그것이 심화시킨 경제 위기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강화하고 있고, 국유화를 거론하는 곳들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전 글 “국유화와 사회주의”에서 다뤘듯이 국유화 확대가 곧 사회주의인 것은 아니다. 이 글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이언 버철이 쓴 것으로, 노동자 통제가 사회주의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설명한다.

솔직히 당신이 하는 일은 뒷사람보다 당신이 더 잘하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틀림없이 십중팔구가 코웃음 치며 “물론이죠” 하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물음은 진정한 사회주의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양대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무엇을 생산하고 제공할지 결정한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들도 사회주의를 국가 소유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미국에서 드러났듯,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도 [2008년 금융 위기로 체제가 위기에 빠지자] 거대 주택 담보대출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을 인수하는 등 일종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영국 보수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를 두고 “시장 실패에 사회주의로 대응한다”고 썼다. 그러나 <데일리 텔레그래프>처럼 정신 세계가 기괴한 자들을 빼면 아무도 부시를 사회주의자로 여기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들은 일자리를 지키는 방편이라면 국유화를 지지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공공 서비스 민영화에도 반대한다. 민영화가 공공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유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1947년 영국 광원들은 탄광 국유화를 환영했다. 하지만 몇 년 안 돼 요크셔 지역 광부들은 새 사용자인 정부에 맞서 (노조 관료들을 거슬러) 파업을 벌여야 했다.

그래서 진정한 사회주의의 전통은 언제나 노동자 통제를 중시했다. 이를 영국의 사회주의자 G. D. H. 콜은 이렇게 표현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사회주의를 온전하게 건설할 수 없다.”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신디컬리즘)이 노동운동 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운동은 국가 소유에 반대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이 산업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프랑스 노동조합들은 “공장이 정부를 대신할 것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영국에서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은 기술공, 광원, 철도노동자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막대했다.

그래서 1918년 영국 노동당은 당헌에 ‘제4조’를 넣었다. 이 조항은 “생산·유통·교환 수단의 공동 소유”뿐 아니라 “인민이 각 산업이나 서비스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실현 가능한 최선의 체제”를 요구한다.

그러나 영국 노동당은 단 한 번도 이 조항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 1945년 영국 노동당 정부는 여러 국유화 조치를 단행했지만, 각료인 스태포드 크립스는 코웃음 치며 이렇게 말했다. “영국에서 노동자의 산업 통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게 바람직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혹시나 또 시비가 붙을까 봐 1995년에 노동당 당시 대표 토니 블레어는 제4조를 “연대·관용·존중하는 정신” 운운하는 장황한 공문구로 개정했다.

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 대중은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아갔다.

당시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가 처음으로 발표한 법령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산업·상업·금융·농업 분야의 모든 협동조합과 기업에서 생산물과 원자재의 제조·구매·판매·판매·관리와 기업 재정을 노동자들이 통제한다.”

당시 러시아에서 진정한 운동은 아래로부터 나왔다. 쫓겨나거나 도망간 공장주가 부지기수였다. 노동자들은 일터를 접수해 스스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었다. 혁명 초기 러시아에 있던 미국의 사회주의자 존 리드는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다.

“한 공장에서 공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한 노동자가 일어나 말했다. ‘동지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자를 구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사장은 기술자도 아니었어요. 기술도 모르고, 화학도 모르고, 회계도 할 줄 몰랐어요, 사장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소유하기였죠. 기술적 도움이 필요하면 기술자를 고용했죠. 이제 공장은 우리 것입니다. 기술자나 경리 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자구요.’”

그러나 [러시아 혁명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경제가 붕괴하고 외국 군대가 침공해 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맹아적인 노동자 통제는 오래 살 아남지 못했다.

때로는 노동자 통제를 명분으로 특정한 노동자 집단이 자기 이익을 계급 전체의 이익보다 앞세우기도 했다. 이를 저지하려고 볼셰비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혁명 초기에 시도된 노동자 통제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감을 준다.

그후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노동자 통제는 세계 도처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1936년 스페인, 1968년 프랑스, 1973년 칠레, 1980년 폴란드, 200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노동자들



노동자 통제의 잠재력을 보여 준 러시아 혁명 시기 소비에트 1918년 전국 러시아소비에트 대회에 파견된 한 지구 소비에트(Venevsky)의 대표자들

은 일터를 장악하고 기존 소유주와 경영자가 쓸모없는 존재일 뿐임을 보여줬다.

1956년 헝가리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 노동자들은 생산을 관리하려고 평의회를 세웠다. 이 기구는 기본 임금 수준과 고용을 결정하고 책임자를 임명했다.

어떤 관리자는 자리에서 쫓겨나 생산 현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라디오 방송국의 노동자 평의회는 연기자, 제작자, 보도자, 기술자, 정비공, 청소년 노동자들을 한데 뭉치게 했고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했다.

1974년 포르투갈에서는 독재 정권 타도를 계기로 노동자들이 일터를 장악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창립자인 토니 클리프는 당시 벌어진 투쟁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리스본 외곽에 있는 작은 의류 공장인 샤프리미나에서는 경영진이 부도 수표로 임금을 지급하려 했다. 오스트리아인 경영자는 해외로 달아났다. 노동자들(다수는 여성이었다)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자신들이 생산한 것을 사람들에게 판매했다.

“플라스틱, 섬유, 로프, 자루 등을 제조하는 공장인 에우로필에서는 노동자 40퍼센트가 임시직이었는데, 경영진이 회사를 파산시키려 했다.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지속했다. 노동자들은 경영진을 쫓아냈고 회사를 무상으로 국유화해 노동자들이 운영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1979년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 샤 왕조 독재가 타도됐을 때 노동자들은 “쇼라”(평의회)를 설립해 공장을 운영했다. 이란의 사회주의자 마르얌 포아는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쇼라는 구매, 판매, 가격 책정, 원자재 주문 등 공장 운영의 모든 측면에 권력을 행사했다.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다양한 위원회가 조직됐다. 직능 위원회는 임금, 노동조건, 보험, 보건,

안전에 관한 노동조합 요구를 제기하는 구실을 했다.

“재정위원회는 개별 공장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재정 운용을 감독했다. 통신위원회는 다른 공장의 쇼라와 연락을 유지하는 구실을 했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여성위원회는 여성 노동자 고용의 요구를 관철했다. 여성위원회는 특히 여성이 노동력의 다수인 섬유·화학 산업에서 두드러졌다.”

2008년 영국에서는 1979년 초 영국을 뒤흔든 “불만의 겨울”이 재현될 조짐이 있었다. 지배자들과 그들에 붙어 먹는 하수인들이 그 시절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당시 노동자들이 산업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1979년 1월 화물 노동자 파업으로 주유소가 폐쇄되고 생필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운송일반노조는 “긴급” 물자 운송을 허용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무엇이 “긴급”한 것인지는 노조 지부 간부들에게 달려 있었고, 현장 대의원들은 이를 결정하기 위해 “허가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달 국민보건서비스(NHS)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파업을 벌였다. 이번에도 무엇이 “긴급”한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했다.

1월 말 총리는 응급 처치를 하는 국민보건서비스 병원이 절반에 못 미치며,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구급차가 거의 없고, 무엇보다도 보건 노동자들이 병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위계

정부가 보기에 이는 임금 인상 파업보다 더 골치아픈 것이었다. 이런 투쟁은 의료 체계 전반의 위계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매일같이 사람을 살린 보건 노동자들은 “긴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문제에서 자신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낫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 통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 일터는 물론 한 나라에서만 사회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자가 공장을 장악해도 결국 시장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착취를 조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노동자 통제는 민주적으로 사회 운영 전반을 계획해 사회 전반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사람들이 무엇을 읽을지는 인쇄 노동자들끼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버스 운행 시간도 버스 노동자들끼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부분별 이익은 사회 전체의 필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주의자 헬 드레이퍼가 말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와 “위로부터의 사회주의”를 가르는데서 노동자 통제는 핵심적인 문제다.

특정 상황에서는 의회가 국민의료서비스처럼 노동자에게 특이 되는 국유화나 실질적 개혁을 단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 통제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순간이 되기까지 일터에서 거두는 작은 승리 모두는 토니 클리프가 말한 “아금아금 진행되는 노동자 통제”라 할 수 있다.

해고된 동료를 방어하며 경영진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노동 “유연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던 고용 조건 악화를 저지하는 것은 모두 노동자 통제를 위한 투쟁의 일부이다.

그런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지배자들에게 맞설 자신감을 얻는다. 경기 후퇴, 전쟁, 엄습하는 기후 재앙의 도가니 속으로 온 세계가 빨려 들어가는 이때 우리는 지배자들에게 말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을 운영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있다고 말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119호 번역 이원웅



고용 보장 없는 기업 규제완화로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는 양보 압박만 키울 뿐이다

이정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요구하면서 말이다.

이 말은 노동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자신의 요구를 앞세우지 말고 희생을 감수하라는 주문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나 방어를 삼가고 순환·무급휴직 등을 감수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의 골간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52시간 상한제가 이뤄졌으니 이런 희생은 치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정책 모두 생색내기 위해 그쳤거나 심지어 정부 스스로 무력화시킨 바 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와 배신으로 제대로 된 처우 개선도 얻지 못했다. 지난 두 달 동안 정부는 가장 피해를 입은 노동자·서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는 굵고 인색하면서 기업 지원에는 노동자 지원에 쓴 돈의 20배를 쏟아부었다. 이런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균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선의 극치다.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그 핵심 내용은 기업을 지원하는 규제 완화로 채워져 있다. 특히, 4월 29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규제 완화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6개월짜리 최저임금 수준의 저질 일자리를 ‘공공 일자리 창출’로 포장해 덧붙였다.

그래서 우파 신문 [조선일보]조차 정부가 “우파 정책으로 일부 방향 전환 [했다]”고 반길 정도다([조선일보] 5월 6일치). 같은 기사에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클릭”이라는 말을 들어도 상관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주요 조직들이 노정협이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총선 때 민주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3월 6일 입단협 연기(임금 인상 요구 자제), 집회 자제를 선언한 노사정 선언(경사노위)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저임금 일자리 양산으로 임금 삭감 압박을 키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다시 복귀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총선 후 “문재인



우려스러운 ‘사회적 합의’ 구성 4월 28일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정부의 보수화 가능성이 높고 경제협력 제고를 앞세워 규제 완화, 노동개악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예측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문재인 정부와 협의해 성과를 얻어 내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총선 직후 코로나19 위기 극복 원포인트 비상협의 기구를 제안한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과 함께 정부 부처별 긴급 정책 협의도 정례화하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4월 29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책 협의의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4월 29일 회동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원격의료 추진 등 규제 완화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민주노총은 고용 유지, 이익 공유 등이 전제된 기업에 대해서만 금융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감 표명을 들은 척하지도 않았고, 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요구는 가뿐하게 삭제됐다.

이런 사례들은 정부가 지금 사회적 대화에 공을 들이는 진정한 목적이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시켜 양보를 이끌어 내고 저항을 무마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

4월 28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참여연대·경실련·YMCA 등 NGO, 한국진보연대가 주축이 돼 노동·시민·사회 단체 535곳이 참여한 ‘코로나19-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이하

시민사회대책위)가 발족했다.

시민사회대책위는 해고 금지와 고용 유지,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의 요구를 내놓았다.

모두 지당한 요구들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결코 간단하지 않다. 예컨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마땅히 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재원 마련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험료도 인상하는 양보안도 함께 내놓았다.

일부 NGO 인사들은 기업은 해고 금지 노력을 하고, 노동계는 임금 동결, 사회연대기금 마련 등의 양보를 하는 사회적 합의 구상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면한 전망인 구조조정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두산중공업이나 항공업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태도도 적잖이 있다. 이런 태도는 해고에 일관되게 반대하기 어렵다.

시민사회대책위는 ‘전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교섭)’ 추진을 주요한 계획으로 삼고 있다. 이 점은 실제로는 우려스럽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상과도 맞닿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 합의 추진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도 양보해야 한다는 압력만 키우기 십상이다. 노동운동 안에서 ‘계급 연대’

를 명분으로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양보안을 내놓을 테세가 된 민주노총 집행부와 같은 개혁주의 세력의 목소리는 저항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특히 좌파단체들이 시민사회대책위에 참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반면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이 대책위에 불참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오히려 좌파 활동가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품거나 계급 협력을 추구하는 것의 문제점을 들춰내며 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할 더 효과적이고 좌파적인 대안을 제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4월 29일 민주노총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정책 협의